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시청 외벽에서 작업자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간판을 설치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행정통합 넘어 교통·산업·복지 통합 시대 열린다

전남광주특별시 어떻게 달라지나

지역화폐 통합·농민수당 확대 여부 주민 관심 집중 군공항·광역철도·무안공항 현안 해결 새 전기 기대 수도권 맞설 초광역 경제권 구축 지역민 기대감 고조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별도의 지방정부 체계를 유지해온 지 40년 만에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재탄생하는 것으로, 행정과 경제, 산업뿐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출범 직후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5~10년 동안 교육·복지·교통·산업 정책이 하나로 재편되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매우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 분야별로 자세히 알아본다.



- 체감되는 변화·명칭 변경
△ 주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될 변화는 행정기관 명칭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도는 물론 산하기관들도 홈페이지 주소와 기관 소개, 조직도, 행정구역 표기를 일체로 수정하고 있다. 특히 통합 초기에는 일부 민원서식과 온라인 안내문에 옛 명칭과 새 명칭이 혼용될 가능성도 있어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

당장 달라지는 변화는 기초지자체 명칭이다. 현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공식 명칭은 ‘광주광역시 동구→전남광주특별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전남광주특별시 북구’ 등으로 변경된다. 전남 시·군도 ‘전라남도 목포시→전남광주특별시 목포시’, ‘전라남도 담양군→전남광주특별시 담양군’ 등으로 달라진다. 이에 따라 도로명 현판과 청사 안내판, 공문서, 각종 증명서, 민원 서식, 공인(도장), 명함, 홍보물 등을 모두 정비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이미 수천 건에 달하는 홈페이지 메뉴와 전산시스템, 내부 행정망 수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 산업 분야·“AI와 에너지, 미래차와 조선산업 결합”
△ 통합특별시가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는 산업이다. 광주는 AI와 미래 자동차 산업을 국가 전략산

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남은 여수국가산단과 광양만권 산업벨트, 해상 풍력, 수소에너지, 조선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행정구역이 달라 공동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통합 이후에는 하나의 산업정책 아래 연구개발과 생산, 실증, 수출이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광주의 AI 기술이 전남의 에너지·조선·농업 분야에 적용되고, 전남의 산업 현안이 광주의 연구개발 실증 무대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과 광주 첨단지구 AI 집적단지, 광양만권 제조업 벨트가 연결되면 전국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교통 분야·“광주 버스 타고 담양·나주까지”
△ 주민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할 변화는 교통 분야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광주와 전남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다. 매일 수만 명이 나주와 화순, 장성, 담양, 함평에서 광주로 출퇴근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 노선과 요금체계, 교통 행정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 시내버스와 전남 농어촌버스를 연계하는 통합환승체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처럼 하나의 교통카드도 광역권 전역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도 중장기 과제로 거론된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 광역철도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광주~화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은 통합의 대표적인 수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송정역과 무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역시 광주와 전남이 같은 행정체계 안에서 논의하게 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제 분야·“지역화폐 통합 가능성”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화폐와 소비시장 확대가 주목된다. 현재 광주는 광주상생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은 각 시·군별 지역화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 이후에는 광역 단위 지역화폐 체계 구축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광주 시민이 나누나 목포, 순천, 여수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도입되면 소비와 유통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채용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이미 광주·전남 공동 권역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통합 이후에는 지역인재 우대 정책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청년 일자리 정책도 광역 단위로 재편될 전망이다. 광주의 청년 창업 인프라와 전남의 산업단지 및 에너지 산업 기반을 연계한 취업·창업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 교육 분야·“전남 교육수당, 광주 학생도 받을까”
△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 중 하나는 교육이다. 현재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 중 하나다. 대표적인 것이 학생교육수당이다. 전남교육청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며 독서·문화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반면 광주는 아직 같은 형태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통합 이후에는 교육재정과 교육정책의 광역화가 불가피한 만큼 전남의 학생교육수당을 광주 학생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광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이다.

반대로 광주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인공지능(AI) 교육과 미래자동차 분야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전남 학생들에게 확대될 수 있다. 현재 광주 학생들은 AI 집적단지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만 전남 학생들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통합 이후에는 교육 프로그램과 예산을 공동 운영하면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고교 교육과정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광주와 전남 학생들이 지역 경계를 넘어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체계가 확대되고 온라인 공동수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입 진학지도 시스템 역시 통합이 예상된다. 광주의 입시 컨설팅 역량과 전남의 진학지원 시

스템이 결합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복지 분야·“출생수당·돌봄정책 격차 줄어든다”
△복지 분야 역시 통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광주와 전남은 비슷한 생활권임에도 출산·육아 지원 정책과 복지사업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달라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통합 이후에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출생지원 정책이 거론된다.

전남은 출생기본수당과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는 청년정책과 돌봄정책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양 지역의 장점을 결합해 보다 균형 잡힌 복지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의료·복지 인프라와 전남의 지역 돌봄 체계를 연계하면 노인 복지 서비스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의료 분야·“응급환자 골든타임 단축 기대”
△의료 분야 변화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에는 상급종합병원과 대형 의료기관이 집중돼 있지만 전남은 의료취약지역이 많다. 특히 도서지역과 산간지역 주민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수 십km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통합 이후에는 광역 의료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골든타임 확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병원과 보건소, 닥터헬기 운영체계도 보다 긴밀하게 연계될 전망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 문제 역시 광역 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농업 분야·“농민수당 확대 여부 관심”
△전남 농어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농업 정책이다. 전남은 농민공익수당과

어민 공익수당을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지역 중 하나다.

광주는 농업 인구 비중이 낮아 관련 정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통합 이후에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서 광주 근교 농업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또 농산물 유통체계 통합도 예상된다. 전남이 생산한 농수산물에 광주의 소비시장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팜과 농식품 가공산업, 수산식품 수출산업 육성도 광역 전략산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 문화·관광 분야·“남도 전체가 하나의 관광도시”
△문화관광 분야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광주 방문객과 전남 관광객을 별도로 유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합 이후에는 광주와 전남 전체를 하나의 관광 권역으로 묶는 전략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의 민주·인권·예술 자원과 전남의 해양·생태·역사문화 자원이 결합되면 전국 최대 규모의 관광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무등산과 담양, 나주 혁신도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순천만, 여수 해양관광, 해남 땅끝마을, 신안 다도해를 하나의 관광코스로 연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국제행사 유치 경쟁력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생활권 통합 시대 본격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곧바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행정서류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당장 느끼는 변화도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수당과 지역화폐, 교통체계, 복지 정책, 산업전략이 하나로 재편되기 시작하면 광주와 전남의 경계는 점차 의미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통합특별시의 핵심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생활통합”이라며 “주민들이 어디에 살든 비슷한 교육·복지·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7월 1일 출범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향후 어떤 정책이 실제로 도입되고 주민들이 얼마나 변화를 체감하느냐가 통합특별시 성공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